

# 오늘의 주요기사

2023 1 3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강원도민일보	12	.				1
江原日報		...18	.	2		2
강원도민일보		[ ]		...		3
강원도민일보	01	.	.			4
江原日報	21	[ ]	( )	.	( )	5
강원도민일보	13	[ ]	( )	.	( )	5
江原日報	21	[ ]	( )			5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통신						6
강원도민일보	07		'		'	7
강원도민일보	02		82%	...		7
江原日報	14		“		”	8
 KBS 춘천			,		94%	9
亞洲經濟		[ ]	2		,,, [1/2...	10
亞洲經濟		[ ]	2		,,, [2/2...	11
江原日報	11		"2		"	12
江原日報	01		'1	5,345	'	13
江原日報	02		'1	5,345	'	13
江原日報	01		"	" 1 3	가 가	14
江原日報	02		"	" 1 3	가 가	14
江原日報	04		300		...	15
 춘천MBC			,	"	"	15
G1방송			,		620	16
江原日報	02				167 ‘	17
江原日報	19	[ ]			, ‘	18
江原日報	19	[ ]	가	,		19
강원도민일보	19	[ ]				20
강원도민일보	19	[ ]				21

## 강원도민일보

2023 01 31 ( )

12



**후계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시연합회장 취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강릉시연합  
회장 이·취임식이 30일 강릉농협 문화센터에  
서 김홍규 시장,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김기영 시  
의장, 금석환 농협강릉시지부장, 최장길 강릉  
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유관 단체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 江原日報

## 고향사랑기부제 한 달...18개 시.군에 2천건 기부 몰려

한달간 시군 합계 3억5천, 연간 50억 될 듯  
출향 강원인.지역 인연 인사들 기부 잇따라  
답례품 지역 특산물.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호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지 한달 만에 강원도내 18개 시.군에는 총 3억5,000만여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한햇동안 도내 지자체에는 총 50억원 가까운 기금이 쌓일 것으로 보여 각종 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도내 지자체별 모금 실적자료를 취합한 결과 3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18개 시.군에 총 2,456건, 3억5,431만여원이 모금됐다. 이는 강원도에 직접 기부된 기부금을 제외한 것으로 강원도청에는 170건의 기부금이 접수됐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속초시에 최고액인 3,777만여원이 접수됐고 양구군이 3,188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참여 건수를 나타낸 지자체는 강릉시로 23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간은 출향 강원인을 비롯해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의 기부가 돋보였다.

새해 첫 날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와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 권혁열 강원도의회장은 주소지인 강릉시를 제외한 영동권 5개 시.군에 각각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포문을 열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는 고향인 춘천시에 연간 기부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4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원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고 양양이 고향인 노용호 국회의원, 양구가 고향인 윤상기 전 강원도소방본부장 등도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장정윤.이주성 부부는 신혼여행을 대신해 신부 부모가 거주하는 동해시에 기부금을 기탁해 뜻깊은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150만 출향강원인들은 2023년 강원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기부 절차와 답례품 선택 방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신청 등의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 중에는 각 지역별 특산물인 닭갈비, 한우, 쌀, 감자, 버섯 등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순위권에 꼽혔다.

윤우영 도 세정과장은 "지난 한 달 간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감사하다"며 "그동안 복잡했던 인증절차를 간편화 하는 등 시스템 개선도 이뤘다. 앞으로는 기부 방법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방종합

## 강원도민일보

### [이모저모] 특별자치도 경제기반 강화...대변 혁 첫 걸음



▲ 30일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과 참석자들이 축하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서영

본지 김종석 회장 등 성공 출범 다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는 법제를 바꾸는 것보다 강원도민과 경제인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것이야말로 성공 출범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 말해 눈길. 김진태 도지사는 “2023년 새해는 강원특별자치도라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환골탈태하는 대변혁의 한 해가 될 것이다”고 선언.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역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도와 협력해 섬세하게 마련하며, 동시에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처방도 준비하겠다”고 약속.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은 “강원도의회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

강원 경제도약 기원 케이크 커팅 이벤트

◇...강원경제 도약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하는 소망 가득 희망 듬뿍 떡케이크 커팅 특별 이벤트를 진행.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박승균 강원중소기업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날 강원경제인 선언을 한 이세진·조세연 대표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염원. “소망 가득 희망 듬뿍” 선창 후 “다 함께 힘내라 강원경제”를 후창하며 성공 기원 북돋고 박수갈채가 이어지기도.

노란우산공제·고향사랑기부 홍보 눈길

◇...2023 강원경제인대회 1부 종료와 함께 오찬 전 상영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준비한 노란우산공제 관련 홍보 동영상과 도에서 준비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 동영상이 한자리에 모인 강원경제인들에게 이목.

2023 국가 및 강원도 주요 경제시책 관련 발체자료집 배포도 강원경제인들에게 관심. 강원 경제인들 오찬 중 고향사랑기부제 언급도 잇달아.



2023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가 30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육동한 춘천시장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자치경제·미래신산업·특화발전 선언

### 2023 강원경제인대회·신년인사회

강원도내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도민일보는 30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웨딩에서 2023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등 도내 경제계 기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해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강원 경제인의 의지와 비전을 하나로 모을 강원경제인 선언, 성공기원 이벤트, 도내 주요 현안 및 경제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경제인들은 약 4개월 앞으로다

가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조기안착을 기원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도는 특별자치도 비전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천명하고 자치경제와 미래신산업, 특화발전 등 3대 축으로 도약에 나선다.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올해는 도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며 "도전 정신과 혁신을 갖고 강원도를 더 강원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석

▶ 관련기사 7면

# 江原日報

2023 01 31 ( )  
21



◇심영곤(사진 왼쪽)·조성운 강원도의원(삼척)은 31일 오전 11시30분 삼척 솔비치에서 열리는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2023 01 31 ( )  
13



심영곤(왼쪽)·조성운(삼척) 도의원은 31일 오전 11시 30분 솔비치 삼척 릴리1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 江原日報

2023 01 31 ( )  
21



◇심오섭강원도의원(강릉)은 31일 오전 11시 강원도립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도립대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

2023 01 31 ( )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회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강릉시**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강릉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회(자치회장 윤병섭)는 지난 27일 중앙동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을 초청하여 '2023년 중앙동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오섭 도의원, 최익순·윤희주·김현수 시의원, 자생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하여 덕담을 나누고 중앙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규제개혁 발판' 글로벌 도시 도약

본지·도·중기중앙회 본부 주최  
도내 경제 기관·단체장 대거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 결의문 낭독  
향토기업 육성 등 균형발전 협력



30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열린 2023 강원경제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3강원경제인대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중요한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강원도 경제분야의 주요 현안과 시책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도민일보는 30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총소기협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등 도내 경제계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계 기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강원도만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이세진 주식회사 로움헬스케어 대표이사와 조세연 비에이텍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강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 강원경제인대회 결의문'을 낭독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했다.

특히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제품 구입, 지역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에 의견을 모았다.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산업에 대한

지원방침과 강원수출 확대, 청년일자리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원 경제인들은 향토기업 육성과 골목상권 보호 등 서민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 경제인들간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자유, 평화, 환경도 모두 넣고 싶었으나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산업이고, 산업은 강원기업인들이 만드는 것이며 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담보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균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오는 6월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게 되기에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과감한 규제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강원 중소기업이 강원경제를 넘어 세계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자"고 다짐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도내 면적 82% 산림... 걸림돌 경쟁력 전환 규제 완화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3. 산림 규제완화, 보전과 개발 균형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의 특성상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산림 관련 권한이양을 통한 규제완화는 필수적인 과제다.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강원산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1만6829km<sup>2</sup>)의 약 82%인 1만3710km<sup>2</sup>(137만1000ha)가 산림이다. 특히, 도내 산림면적 중 88%인 120만7000ha가 보전산지로 지정, 보전산지 해제와 개발허가권 등을 가져오는 게 가장 시급하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공·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돼 있어 권한이양 없이는 각종 전라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산지전용허가권과 보전산지변경·해제 권한, 산지일시사용허가권 등 산림청장의 실질적인 권

보전산지권한 산림청 수용 미지수

백두대간 권한 이양 반발 예고

"보전·개발 가치 종합 고려해야"

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다.

다만 보전산지 변경·해제권한은 제주특별법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 산림청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도는 도내 산림면적이 제주(8만8874ha)의 10배가 넘는 산지개발·활용에 관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관계자는 "산림면적이 많은 도의 특성상 산림규제 관련 권한이양 여부가 특별자치도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도는 산지관리에 대한 권한 외에도 백두대간·민북지역 보호지역 규제완화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권한 등을 도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관철까지는 정부 설득이 남아있어 확정까

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 및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을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백두대간법, 국유림법 등 각종법에 따른 각종 산지관련 중첩규제를 일괄 해소, 개발의 용이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어서 산림청이 고유 권한을 내줄지도 미지수다.

도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14만5000ha, 민북지역 산지는 7만2000ha로, 전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52%, 전국 민북지역의 82%를 각각 차지한다. 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산지이용과 관련해 너무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거센 입법저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에 준하는 규제완화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은 강원도의 큰 경쟁력이면서 걸림돌이기도 한 만큼 보전과 개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환·김덕형

江原日報

2023 01 31 ( )

14

# “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 특례 포함”

강원특별법 개정 설명회서  
시, 관련 법안 12개 도에 제출

**【동해】**동해시가 최근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 설명회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견인할 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 특례’ 등의 법안을 강원도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시는 북방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항만물류와 석회석 폐광지 지원 중심의 법안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를 마련했다. 또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특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항만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 특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도 준비했다.

특히 석회석 폐광지 분야 특례의 경우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강원도와 함께 향후 과제로 설정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입법과제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등 총 12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규

제 완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수중·수상레저 관광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타 특례 조항, 어촌어항개발, 관광, 교육특구 등 제반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규언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강원도와 힘을 합쳐 나가고, 이번 특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해시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2023 01 30 ( )

KBS 춘천

## 강원도, 시군 주요 현안 94% 정상 추진



강원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8개 시군의 현안·전략 과제 99건 가운데 94%인 93건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시군과 공동 대응해 올해 예산에 24개 과제, 3천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시군 현안 관련 소통 창구를 자치행정과로 일원하고, 정기적으로 시군 현안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해결할 방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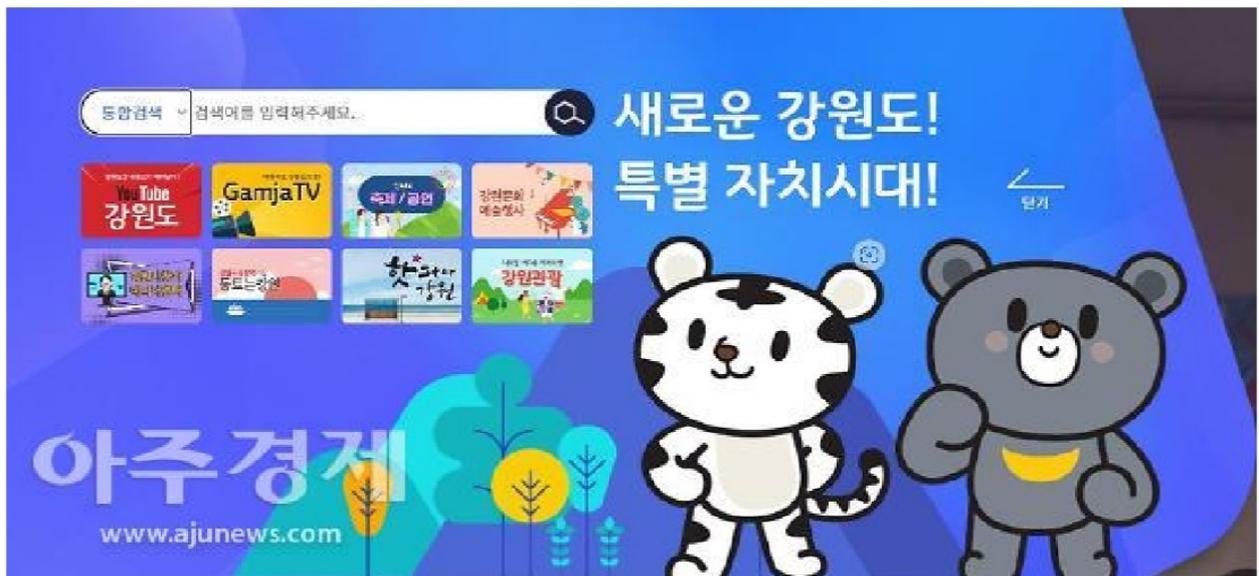
최현서

亞細亞經濟

[현장에서] 제2 강원도청사 개청 일자는 정해졌지만,,,

(춘천·강릉)강대웅 기자

7월1일 개설에 강릉 등 영동지역주민 한껏 고무  
 강원도 조직개편 시행령 법규 마련 진행 급물살  
 만만치 않은 과제도 산적... 보완책 마련이 관건  
 지역 주민 미래를 위해 신속히 가는 지혜 발휘 기대



[사진=강원도]

강릉시민들은 요즘 그 어느 때 보다 고무돼 있다. 그뿐만 아니다. 그동안 강원 영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것으로 생각하던 속초 주문진 등 영동·남부권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강릉 제2청사 개청 날짜가 확정되는 등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관련 강릉사랑시민연대와 강릉시의회 간담회에도 이런 열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직원 300명 규모의 임시 청사 및 숙소 마련, 신축 청사 위치 선정, 산하 기관 유치, 도청 제2청사 추진협의회 구성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한층 기대가 고무됐다.

이를 볼 때 이젠 제2청사 설치를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 오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관광과와 민원과 등 몇 개과를 증설해 놓고 이름만 제2청사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등 요구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강릉 등 영동·남부권 시민들의 이 같은 기대는 강원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춘천 등 영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강원 도청 소재지와 주요기관이 영서북부권인 춘천에 치우쳐 있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 인구는 28만명, 영동 지방의 중심지인 강릉시도 21만 명밖에 안 된다. 4대 도시라는 동해는 9만이다. 반면 원주는 36만 명이다. 영서 지역 인구를 합치면 100만 가까이 된다.

## 亞洲經濟

강원도 인구의 60%가 영서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반면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속초, 양양, 태백 등 영동권은 47만 명에 불과하다. 지역 총생산도 대비된다. 2019년 기준 강원 영서 지역 내 총 생산액은 29조 773억원인 반면 영동·남부권은 19조 7452억원 에 불과했다. 정확히 6대4 비율이다.

영동권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청에 준하는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어왔고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신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염원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태 도지사는 선거 당시 이런 염원과 숙원 해결을 약속 했다. 강릉에 부지사급의 강원도청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당선 이후 바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2청사를 짓겠다고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9일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 오는 7월 1일 강릉에 제2청사를 개청하겠다는 구체적 날짜까지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어 7월 1일부터 근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또 한 사실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우선 청사 문제가 거론된다. 예정대로 7월1일 강원도청 제2청사가 개청한다면 남은 기간은 160여 일 남짓으로 신축 입주는 불가능해서다. 따라서 임대 청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급한 대로 강원도환동해본부 사임당교육원과 강원도립대 등 강릉 주문진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건물 모두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 임대 협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제2청의 조직 구성에 관한 법규 마련이다. 부지사급을 포함한 최소 5개국 설치가 거론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일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800만명 이상 광역자치단체만 3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반면 현재 강원도의 인구는 153만 명 정도다. 따라서 법규상 제2청사에 부지사급 책임자가 수장을 맡을 수 없다.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해 부지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의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2청사 추진 중인 강원도 또한 당초 5개국 설치를 계획을 축소, 해양·수산 업무를 포함해 2~3개국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칫 무늬만 제2 강원도청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도청조직에서 강릉 2청사로 이동할 부서를 분류하는 조직개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청사 분리 조직개편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역시 만만치 않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도청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이전 지원 방안 등도 논의가 필요해 보여서다. 영동권 지역사회에서 도청 제 2청사 개청 소식을 반기면서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제2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문제도 관건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얼마를 들여 건립한다는 로드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행정2부지사가 수장을 맡고 있는 경기북부청 신설 및 조직 구성과 법규 마련 사례를 살펴보아도 좋을 듯싶다.

경기도 북부청은 남부 수원에 도청이 소재 함으로써 상대적 소외 당하는 경기 북부, 당시 행정구역 기준 의정부시, 양주군, 고양군, 파주군, 연천군, 가평군, 포천군을 위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청 북부출장소를 의정부에 둔 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처음은 셋방살이였고 1999년 의정부에 도청 제2청사를 두는 것이 확정됐다. 이후 기능이 더욱 확대돼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기와 남북, 동서만 다를 뿐 강원도 사정과 매우 흡사하다.

아무튼 오는 7월 1일 도청 영동 제2청사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자칫 치적만을 앞세우면 발묘조장(拔苗助長) 하기 십상이다.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가 멀리 보며 신속히 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춘천·강릉)강대웅 dwkang@ajunews.com

2023 01 31 ( )

11

江原日報

#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

원주시 등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긴급 임시회서 촉구  
원강수 시장 “제 역할 하도록 정부가 힘 실어줘야”

【원주】원주시를 포함한 전국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모임인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정부 2차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3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에서 긴급 임시 회를 열고 전국 11개 혁신도시 시·군·구 단체장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닌 원도심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이 원도

심 활성화로 이용된다면 그동안 자치단체가 힘써 온 ‘혁신도시 살리기’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에 이어 원도심 도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은 혁신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임시회에 참석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은 현재의 혁신도시 정책이 정부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인 만큼, 후속 대책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30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혁신도시 11곳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회를 열고 정부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혁신도시가 불안정한 상태이고 성공적으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재현돼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상호 협력을 위해 2006년 12월 설립됐으며 원주 등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허남윤기자**

# 江原日報

2023 01 31 ( )  
01

## 강원 관광객 '1억5,345만명' 코로나 이전 회복

강릉 지난해 3,577만명 '1위'  
춘천·원주·속초·양양·고성順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외부 방문객이 1억5,345만명을 기록,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강원도관광재단이 30일 발표한 '2022년 종합 및 12월 강원관광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객은 1억5,345만명으로

2021년 1억3,026만명보다 2,319만명, 2020년 1억3,111만명보다 2,234만명 늘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억4,000만명을 훌쩍 웃돌았다.

방문객 증가율은 17.8%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고 2위 인천(14.91%), 3위 제주(14.87%), 4위 서울

(14.70%) 등과도 격차를 보였다. 시·군별로는 가장 많은 3,577만명이 다녀간 강릉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춘천 3,242만명, 원주 3,161만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속초 2,506만명, 양양 1,683만명, 고성 1,310만명, 동해 1,201만명, 삼척 1,175만명 등 동해안

시·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내륙에서는 대규모 스키장과 물놀이 시설이 위치한 홍천 1,747만명, 평창 1,703만명 등이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다.

신형철기자

2면에 계속

# 江原日報

2023 01 31 ( )  
02

## 도 방문객 1억5,345만명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면에서 계속

다만 지난해 말 방문객 수가 1,051만명으로 전월 1,125만명, 전년 동월 1,101만명보다 줄어든 것은 우려할 점으로 꼽힌다.

관광재단은 스키장 개장 시기 지연과 카타르 월드컵 개최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지만 이때부터 해외 여행이 본격화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관광객들의 강원도 방문이 꾸준히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문규 강원도관광재단 관광마케팅실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문객을 회복한 점은 강원 관광에 청신호”라며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江原日報

2023 01 31 ( )  
01

## “몰라서” 1만3천가구 가스비 감면 못받아

장애인 등 제도·신청 절차 몰라  
에너지바우처도 4천가구 누락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제도와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  
지 못한 취약계층이 강원도에서 1만  
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 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매년 9  
만원씩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이  
용권)’도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친  
수급 대상은 4,000가구를 넘어섰다.  
치솟는 난방비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산업통상  
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에 따르면 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데  
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  
난해 강원도내에서 1만 3,595가구로  
나타났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2면에 계속

# 江原日報

2023 01 31 ( )  
02

지난해 도내 1만3천가구  
가스비 감면혜택 못 받아  
-1면에서 계속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 대상  
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  
다. 다만 이 혜택은 ‘신청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4만1,223가구가  
신청 대상이었지만 이 중 4,324가구  
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  
자,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  
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대 의원실은 “수급자 대신 정  
부나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법  
을 바꿔 더 많은 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 300명 이상 명퇴 ... 강원 교사 부족 사태 심각

지난해 331명 명예퇴직  
교원 침해 등 변화 영향  
신규 선발 미미 대책 시급

교권 침해 등 학교 교육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강원지역 교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3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 한 도내 초·중·고 교사 수는 331명으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명예퇴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정년퇴직까지 1년 이상 남아야 가능하다.

명예퇴직 교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명예퇴직 한 도내 공·사립 교원 수는 154명으로 100명대였으나 2018년 231명으로 늘더니 2019년에는 300명을 기록했다. 2020년 305명, 2021년 332명 등 최근 4년간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정년퇴직하는 교원보다 명퇴를 선택하는 교원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명퇴한 공립 초등 교원은 86명으로 정년 퇴직 교원 47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2021년에도 정퇴 교원은 37명, 명퇴는 94명으로 차이가 났다.

중등으로 가면 격차는 더욱 커졌

다. 지난해 공립 중등 교사 정년퇴직자는 48명인 데 비해 명퇴자는 203명에 달해 명퇴를 선택한 교원이 정년 퇴직자보다 4배가량 많았다. 2019년의 경우 공립 중등 교사 204명이 명예퇴직했는데 같은 해 정년 퇴임한 교원은 22명으로 명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교권 침해는 물론 학생 지도 등에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퇴직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연금 수령도 늦춰져 오히려 명예퇴직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일찌감치 교직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고 있지만 신규 교사 배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공립 초등 교사는 133명(명퇴 86명, 정퇴 47명)이지만 올해 초등 교사 선발인원은 93명에 불과하다. 안 그래도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로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추이를 보면 정년퇴직자보다 명퇴자가 더 많다"며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2023 01 30 ( )



##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 무기한 천막농성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30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차등 없이

지급하는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 학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주희

joohee526@naver.com

2023 01 30 ( )

G1방송

## 강원소방, 지난해 하루 평균 620건 출동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지난해 강원도에서 하루평균 1,200여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6백여 건을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9 신고접수는 45만 2천 221건, 출동 건수는 22만 6천 450건으로,

하루 평균 신고는 1239건, 출동은 620건 이었습니다.

전년보다 신고접수는 6%, 출동건수는 27% 증가했습니다.

강원소방은 지난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인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했기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 휘청이는 도내 건설업 작년 167곳 ‘줄폐업’

## 경기 침체·고금리 직격탄

강원도 내 건설업체들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무려 167곳이 문을 닫았고 일부에서는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를 멈추는 현장도 발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건설업체 폐업신고 수는 167건으로 전년(134건)보다 33건 늘었다.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다. 폐업신고는 특히 연말에 몰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폐업 신고 건수 5년 내 최고 올해도 벌써 17개 업체 달해 일부 현장 자금난에 공사 중단

폐업신고 수는 13건이었으나 12월에만 22건이 집중됐다.

올해는 건설업체들의 줄폐업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도내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는 총 16곳에 달했다. 주택건설업계에선 1곳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춘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인

50대 A씨는 “금리 인상으로 안 그래도 없던 민간발주는 아예 씨가 말랐고 공공발주를 따는 것도 쉽지 않아 업체들이 수익을 낼 곳이 없다”며 “업계에선 올해가 고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평창군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은 최근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해당 사업 시행사 측은 군에 시공사 교체를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 장사동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 시공사의 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준공이 3개월가량 연기됐다. 당초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3월로 일정이 밀렸다. 공정을 95%로 준공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한 만큼, 신탁사에선 시공사 교체 대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시장 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양상이 뚜렷해지며 업체들도 신규 사업을 벌이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 江原日報

2023 01 31 ( )  
/ 19

## 아파트값 급락에 강제경매 급증, '역전세난' 대책은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0.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0.82%)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큰 하락이다. 지난해 9월 0.16% 떨어진 이후 10월 -0.39%, 11월 -0.62%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8,281만원으로 2022년 1월 1억8,514만원보다 233만원 감소했고 가장 가격이 높았던 7월의 1억8,722만원에 비하면 441만원이나 줄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이 1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총 491건으로 전월(209건) 대비 134.9% 급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이며 상반기 월평균 315건에 비해서도 55.9%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입

차인은 낙찰될 때까지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세입자는 경매로 집이 팔린 뒤에야 전세금을 회수하게 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 있다.

게다가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공포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적은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나온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면 새 아파트 전세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상반기에 급증할 신축 아파트 입주도 전셋값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치밀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서민, 청년 세입자 가구가 가장 큰 재산인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관의 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아파트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는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한층 보강된 세입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 江原日報

2023 01 31 ( )  
/ 19

## 물가 폭탄, 비상하고 정교한 민생대책 세워야

민생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3고' 현상이 민생을 덮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오른 강원도에서는 최근 난방비 폭탄까지 터졌다.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교통비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4%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1998년(19.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1월부터 폭등한 난방비의

경우 2분기부터 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발 공공요금 인상을 예상한다. 강릉시는 1

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10% 올렸다. 매달 물 15톤을 이용하는 가구 기준 월 납부액은 기존 1만7,540원에서 1만9,150원으로 1,610원이 뛰었다.

고물가는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을 보면 강원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 물가 안정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중앙정부도 대책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정책수단이 더 제한적인 자치단체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 그러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먼저, 물가 상승 요인을 분산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역 공공요금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 요인이 시급하지 않은 품목, 인상 압박이 강

한 품목 등 사안별로 구분하고, 인상 시에도 가능한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 가격을 한번에 올리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인상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물가 관리도 중요하다. 강원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비중이 높을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가 상승 기여도가 높은 품목 관리를 통해 주민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이동성이 낮아 가격 인상 압박이 큰 서비스 부문의 가격안정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요금은 1,000원 단위로 가격이 올라 인상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서민경제 압박

### 지난해 도내 교통비 물가지수, 24년 만에 최고

### 지자체, 취약계층 생활고 지원 리더십 발휘를

용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우대 등 지자체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유인 구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류 지출 비중이 큰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망 개선·확충과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물량 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물가는 한 번 상승세를 타면 쉽게 가라앉히기 어렵고, 물가를 잡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지자체는 고물가 부담이 큰 서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31 ( )  
/ 19

## 의료공백 비상한 대책 필요

-속초의료원 끝내 응급실 축소 운영, 정상화 절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2월 한달 동안 1주일에 목, 금, 토, 일 4일만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의료진으로는 매일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초, 고성을 비롯한 영동 북부지역 주민들은 축소 운영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가 응급실이 아예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 속초시 등 행정기관은 고질적인 의료 현안으로만 여기지 말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세워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 운영 차질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의료진의 타 지역 유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원은 5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야간을 돌아가며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최근 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와 같은 응급실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2명이 퇴사하면 3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속초의료원 측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원은 급하게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모집하

는 공고를 냈지만 조기 총원은 불투명합니다.

의료진 부족은 속초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 유일 국립정신의료기관인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병원장 임기가 끝난 뒤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병원장 공고를 냈지만 채용되지 못하고 벌써 5개월 넘게 공석입니다. 더불어 원장 대행 맡았던 전문의 또한 병원을 떠나면서 현재 입원 치료와 전공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간신히 2명의 임시의사를 고용해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축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 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최대한 빨리 채용을 마무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쇄적인 의료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 인력 수급체계에만 의존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건강권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와 행정기관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31 ( )  
/ 19

### 경제 특례 중소기업에 초점 두길

-강원경제인대회, 실익과 지속가능한 특별자치 요청

강원특별자치도 원년답게 지역 미래를 둘러싼 담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월30일) 열린 강원 경제인대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특별자치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치경제와 미래 신산업, 특화 발전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에 역량을 결집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경제'를 맨앞에 뒀다는 점에서 강원 경제의 구심점인 중소기업 및 지역 밀착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현안임을 드러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교통문제 개선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토목, 건축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교육시설 발전 방안을 교육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사 기간과 적정한 공사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특례를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넓힐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는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 공동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 공동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특례를 통한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교계 대표들은 특별자치도의

산업 발전 방향이 단순한 개발이 아닌 자연환경 반영을 바랐습니다. 겨울축제 방문객 수가 말해주듯 강원도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기반한 관광산업은 강원경제의 핵심입니다. 농수축산물 1차산업 판매와 유통에도 긍정적 파급을 줍니다.

강원도는 관광산업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허약한 제조업 기반을 제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도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 완화 및 권한 이양의 초점을 대기업 및 대규모에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각 시군에 포진해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했다가는 낭패를 볼 여지가 큼니다. 대기업 공장 유치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려드는 사안이기에 자칫 빈손이 되기 싶습니다.

강원경제인대회에 참석한 다수의 중소기업 경제인들이 실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특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육성해온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도록 뚜렷한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강원도가 전시 효과에 골몰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기존 산업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